

1. 다음 중 행정에 대한 개념으로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넓은 의미의 행정은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서 정부조직을 포함하는 대규모 조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 ② 최근 행정의 개념에는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외의 공·사조직들 간의 연결네트워크, 즉 거버넌스(governance)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좁은 의미의 행정은 행정부 조직이 행하는 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한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
- ④ 행정은 정치과정과는 분리된 정부의 활동으로 공공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 분배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 ⑤ 행정과 경영은 비교적 유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목적하는 바가 다르다.

[정답] ④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24

[해설] 광의의 행정(administration)은 조직 일반에 적용할 수 있는 관리기술이나 인간의 집단적 협동의 측면에서 정의된다. 광의의 행정 개념은 '공행정(Public Administration)' 과 '사행정(Business Administration)' 으로 나누어진다. 공행정(행정, Public Administration)은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행정이란 정치권력을 바탕으로 한 공공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행정의 권력성을 바탕으로 한 정치의 속성과 관리성을 바탕으로 한 경영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볼 때 행정이 정치과정과 분리된 활동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2. 행정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책이 정책을 낳는 관성은 행정의 팽창을 가져온다.
- ② 행정의 과부하는 행정수요의 감소를 가져온다.
- ③ 행정의 팽창은 시장실패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 ④ 다양한 위기상황은 행정국가에서 최소국가로의 발전을 자극한다.
- ⑤ 행정국가는 삼권분립을 전제하지 않는 국가구성 원리이다.

[정답] ①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p.82-85

[해설] 행정국가는 행정 팽창을 유지하려는 관성과 관련된다. 즉, 행정이 거대해지고 그 사업이 확대된 다음에는 계속적인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하고 축소폐지에 저항하는 관성이 생긴다.

- ② 행정의 과부하는 행정국가의 폐단에 해당한다. 행정의 역할 비대화는 문제해결의 곤란, 업무수행의 질 저하, 업무처리의 지연 등의 폐단을 초래한다.
- ③ 행정의 팽창은 정부실패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 ④ 전권과 같은 위기상황의 발생은 정부기능의 팽창을 초래한다.
- ⑤ 행정국가는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되, 입법과 사법에 비해 행정체제가 공공부문의 운영을 주도한다.

3. 보통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의 정당성은 해당 재화를 시장에 맡겨 놓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 즉 시장실패에 있다. 다음 중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는 공공재의 생산
- ② 전력, 상하수도 등 고정비용이 변동비용에 비해 매우 높은 자연독점 상태의 서비스 제공
- ③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식품의 유통
- ④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산업
- ⑤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

[정답] ⑤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p.91-96, 125

[해설]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단체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인 민간위탁은 민영화의 한 유형으로서, 정부실패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식이다.

4. 임대형 민자사업(Build-Transfer-Lease)의 효과가 아닌 것은?

- ① 재정부담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미래세대가 금전적 부담 없이 시설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
- ② 민간의 창의력을 활용해 투자 효율을 높일 수 있다.
- ③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의 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 ④ 민간부문의 유희자금을 장기 공공투자자로 유인할 수 있다.
- ⑤ 정부가 통상적으로 연간 예산으로 건설하기에는 소요시간이 많이 드는 긴요한 공공시설을 민간자본을 통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정답] ①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127.

[해설] 사회간접자본(SOC) 민간투자제도는 SOC 투자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자원을 모두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적절한 SOC 투자 수준을 유지해 나가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창의·효율성을 공공부문에 활용함으로써 다양하고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자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자유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방식을 다양하게 허용하여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를 발휘될 수 있도록 하였다.

|                             |                                   |
|-----------------------------|-----------------------------------|
| BOO(Build-Own-Operate)      |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
| BTO(Build-Transfer-Operate) | 민간사업자가 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시설운영까지 담당    |
| BTL(Build-Transfer-Lease)   | 민간사업자는 투자와 건설을 담당하고, 정부가 시설운영을 담당 |

(2) 최소운영수입 보장, 매수청구권 인정, 환리스크 부담 등 과감한 정부의 지원조치로 민간투자에 따른 사업 위험을 대폭 낮추어 준다.

(3) 실시협약 체결시에 수익률,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조건을 사전에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자는 자신의 경영 책임하에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부담하게 되며, 정부로서는 총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① BTL의 경우 이와 같이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민간사업자에게 임차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금전적 부담 없이 시설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5. 정부관료제에 대한 설명 중 참여적 정부모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① 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통제 문제와 관련하여 구조보다 절차를 더 중시
- ② 정부관료제가 시민에 봉사하기 위해 직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희생적이고도 재능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가정
- ③ 책임운영기관과 같은 준자치적인 조직들이 상부로부터의 정책이나 이념적 지시에 순응할 것을 기대
- ④ 공조직이 보다 수평적으로 전환됨으로써 조직의 고위층과 최하위층 간에 계층의 수가 많지 않아야 한다는 것
- ⑤ 특정한 정책영역에 항구적인 관할권을 지닌 전통적인 형태의 조직에 의존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신축성을 증대시키거나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를 낳게 됨을 강조

[정답] ④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p.232-233.

[해설] 참여적 정부모형은 계층제적 구조를 문제로 보면서 계층 구조를 축소하는 평면조직화를 처방한다.

| 구 분        | 전통적 정부               | 시장적 정부             | 참여적 정부          | 신축적 정부  | 탈내부규제적 정부 |
|------------|----------------------|--------------------|-----------------|---------|-----------|
| 문제의 진단기준   | 전근대적 권위              | 독 점                | 계층제             | 영속성     | 내부적 규제    |
| 구조의 개혁방안   | 계층제                  | 분권화                | 평면조직            | 가상조직    | -         |
| 관리의 개혁방안   | • 직업공무원제<br>• 절차적 통제 | • 성과급<br>• 민간기법    | • 총품질관리<br>• 팀제 | 임시적 관리  | 관리적 재량 확대 |
| 정책결정의 개혁방안 | 정치-행정의 구분            | • 내부시장<br>• 시장적 유인 | 협의·협상           | 실 험     | 기업가적 정부   |
| 공익의 기준     | 안정성, 평등              | 저비용                | 참여, 협의          | 저비용, 조정 | 창의성, 활동주의 |

6. 행정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민주성과 합법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 ② 중립성은 공무원 개인의 사회적 욕구의 포기를 요구한다.
- ③ 효과성과 능률성은 항상 조화의 관계에 있다.
- ④ 가외성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 ⑤ 절차로서의 민주주의는 사회정의의 보장을 한다.

[정답] ④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326,332

[해설] ①③ 민주성과 관련된 가치 상호 간이나 능률성과 관련된 가치 상호 간에는 조화 가능성이 높고(갈등 발생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 민주성과 관련된 가치와 능률성과 관련된 가치 상호 간에는 갈등 가능성이 높다(조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님).

|             |  |
|-------------|--|
| 민주성과 관련된 가치 | 공익성, 민주성, 합법성,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 대응성          |
| 능률성과 관련된 가치 | 합리성(수단적 합리성),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효율성, 중립성 |

② 중립성은 정치적 중립성을 의미하며,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적 특수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법적 의무와 공직윤리에 따라 공평성, 중립성, 불편부당성(不偏不黨性)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회적 욕구의 포기와는 관계 없다.

⑤ 민주성의 유형을 절차적 민주성과 실질적 민주성으로 구분할 때, 사회정의의 보장(실현)은 실질적 민주성과 관련된다.

|                             |  |
|-----------------------------|--|
| 절차적 민주성<br>(By the people)  |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국민의 동의를 기초로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데 뜻이 있으며, 입헌주의, 법치주의, 참여의 보장, 국민요구의 수렴 등을 말한다.               |
| 실질적 민주성<br>(For the people) | 국민을 위한 정부활동을 강조하면서 행정체제가 국민의 복지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와 관련되며, 행정기관의 능동적·적극적·쇄신적 역할을 중시한다. |

7. 규제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Lowi는 정책의 한 유형으로 규제정책을 제시하였다.
- ② 개인, 조직의 행동이나 재량권에 제재나 제한을 가한다.
- ③ 재산이나 권리를 많이 소유한 집단에게서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이전시킨다.
- ④ 환경오염, 독과점을 방지할 때 많이 사용되는 정책이다.
- ⑤ 관련 집단들 사이에서 갈등이 많이 나타난다.

[정답] ③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365

[해설] 규제정책은 개인이나 일부집단에 대해 재산권 행사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여, 반사적으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달리 피규제자와 수혜자가 명백히 구분되고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집단 간 갈등의 수준이 매우 높으며, 치열한 경쟁이 발생하고, 다원론적 정치과정이나 나타난다. 그리고 갈등과 타협으로 특징지어진다. ③은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

8.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 ② 정책문제망은 정책공동체보다 폐쇄적이다.
- ③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될수록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다.
- ④ 정책문제망의 권력게임은 대체로 포지티브 섬 게임이다.
- ⑤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의 격화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약화시킨다.

[정답] ⑤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p.386-388

[해설] ☞ 정책공동체(정책커뮤니티)와 이슈네트워크(정책문제망)의 비교

|           | 정책공동체(정책커뮤니티)  | 이슈네트워크(정책문제망)   |
|-----------|--|---|
| 정책행위자     | 제한적, 폐쇄적   | 개방적(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
|           | 정부부처, 의회의 상임위원회, 특정 이익 집단, 전문가집단   | 조직화된 이익집단뿐만 아니라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 전문가, 언론 등                                |
|           | 모든 참여자가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공유한다.  | 교환할 자원을 가진 참여자는 한정적이고, 상황에 따라 중요시되는 자원의 종류가 달라지며, 그에 따라 주도적 행위자도 변한다. |
| 행위자 간의 관계 |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 관계   | 유동적이고 불안정적 관계   |
|           | 균등한 권력 보유  | 불균등한 권력 보유  |
|           | 상호 협력적 관계(수평적)   | 경쟁적 관계(수평적)   |
| 정책산출      | 포지티브 썸(positive sum) 게임  | 제로 썸(zero sum) 게임 또는 네거티브 썸(negative sum) 게임                          |
|           | 처음 의도한 내용  | 결정과정에서 정책내용의 변동   |
|           | 예측 용이  | 예측 곤란   |
| 국가의 역할    |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 유사  | 정책산출과 집행의 결과 상이   |
|           | 국가는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를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의 행위자이다. 국가 기관의 범주에는 행정부, 의회, 사법부 모두가 포함되는데, 이들은 국가라는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개별 행위자로 간주된다. |   |

9. 다음은 정책결정모형 가운데 점증주의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수 몇몇 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있다.
- ② 사회가 불안정할 때는 적용이 곤란하다.
- ③ 기존 정책이 잘못된 것이면 악순환이 초래된다.
- ④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강하나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 ⑤ 정책의 축소·종결 작업이 매우 어려워진다.

[정답] ④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452

[해설] 점증모형은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하며,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① 점증모형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정치적 조정 및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압력 및 영향력이 큰 강자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이 높으며, 힘 없는 약자의 이익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10. 조직구조의 모형 중 조직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 방식은?

- ① 기능구조
- ② 수평구조
- ③ 네트워크구조
- ④ 사업구조
- ⑤ 매트릭스구조

[정답] ③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718, 750 문제29번과 동일

[해설] 네트워크구조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등장한 유기적 조직 유형의 하나로서, 조직의 자체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 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 방식이다. 네트워크구조하에서 중심 조직은 전략, 계획, 통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대부분의 생산 기능은 다른 조직에 위임하기 때문에 공동조직(hollow organization)이라고도 한다.

29. 조직 자체의 기능은 핵심역량 위주로 합리화하고, 여타 기능은 외부기관들과 계약관계를 통해 수행하는 조직구조 방식은?

- ① 기능구조
- ② 사업구조
- ③ 매트릭스구조
- ④ 수평구조
- ⑤ 네트워크구조

[정답] ⑤

[해설] 네트워크구조는 유기적 조직 유형의 하나로서, 정보통신기술의 확산으로 채택된 새로운 조직구조 접근법이다. 한 조직 내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방식을 탈피해 아웃소싱(outsourcing)을 강조한다.

11. 다음 중 시장형 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회 의장은 선임비상임이사
- ② 선임비상임이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
- ③ 한국전력공사
- ④ 인천국제공항공사
- ⑤ 감사위원회 설치의 임의사항

[정답] ⑤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731, 734  
 [해설] 시장형 공기업에는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즉, 감사위원회 설치의 의무사항(필수사항)이다. 시장형 공기업에는 가·전·공·항(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 있다.

| 구 분       | 시장형 공기업  | 준시장형 공기업, 준정부기관 |
|-----------|--|-----------------|
| 이사회 의 의 장 | 선임비상임이사<br>(비상임이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 | 기관장             |

12. 다음 중 적극적 인사행정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 ① 모집방법의 다양화
- ② 인사의 분권화
- ③ 정년보장식 신분보장
- ④ 정치적 임용의 부분적 허용
- ⑤ 실적주의의 비용통성 보완

[정답] ③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898  
 [해설] 적극적 인사행정이란 인사행정의 원칙으로서, 소극적인 실적주의와 과학적 인사행정만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실적주의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여 업관주의적 요소나 인간관계론적 요소를 신속성 있게 받아들이는 발전적 인사관리 방안을 의미한다. 그리고 적극적 인사행정은 강력한 신분보장을 받는 직업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13. 직업공무원제를 올바르게 수립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 ② 공무원 인력계획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운용되어야 한다.
- ③ 젊은 사람보다는 직무경험이 있는 사람이 채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해야 하며, 보수가 적절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 ⑤ 승진·전보·훈련 등을 통한 능력 발전의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한다.

[정답] ③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903  
 [해설] ㉠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1) 실적주의의 우선적 확립 : 능력과 실적 중심의 공직 임용, 공개경쟁시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신분보장 등 실적주의 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필요조건). 그러나 실적주의가 확립되었다고 해서 직업공무원제가 반드시 확립되는 것은 아니다(충분조건은 아님).  
 (2) 공직에 대한 높은 사회적 평가 : 민주적 공직관에 입각한 공공봉사자로서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제고하여야 한다.  
 (3) 젊고 유능한 인재의 채용을 위한 유인체제의 확립 : 학교를 갓 졸업한 젊고 유능한 인재가 공직에 유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승진제도와 같은 유인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4) 보수의 적정화와 연금제도의 확립 : 재직 중은 물론 재직 후의 생활 유지도 보장되어야 한다.  
 (5) 재직자의 교육훈련에 의한 능력발전 및 승진 : 능력발전을 위해 교육훈련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승진·전보·전직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6) 장기적인 시각에서 직급별 인력수급계획의 수립 : 이직률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7) 폐쇄형에 바탕을 둔 계급제의 확립 : 개방형에 바탕을 둔 직위분류제는 직업공무원제 확립을 저해한다.

14.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중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예비비란 정부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운영하는 예산제도이다.
- ②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 이용하는 제도로서, 이월 이후에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③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도 및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며,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최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수년도에 걸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8. 행정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통제는 설정된 행정목표 또는 정책목표와 기준에 따라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맞출 수 있도록 시정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 ② 행정통제의 기준으로는 시민의 자유보전과 공공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을 들 수 있다.
- ③ 행정통제는 그 주체와 영향력 행사 방향에 따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로 나눌 수 있다.
- ④ 감사원은 헌법기관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감사기능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부통제를 실시하는 기관이다.
- ⑤ 행정통제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은 행정통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답] ④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p.1453-1454

[해설] 감사원(대통령 직속)은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직무감찰과 회계감사의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사후통제를 한다. 한편 감사원은 헌법이나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은 아니지만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직무상 독립기관).

☞ 통제주체에 따른 행정통제 분류 : 내부통제와 외부통제(Gilbert의 분류)

| 구 분 | 내부통제  | 외부통제                       |
|-----|---|----------------------------|
| 공 식 | 행정수반(대통령), 교차기능조직, 독립통제 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계층제(상관), 심사평가 | 입법부, 사법부, 읍부즈만             |
| 비공식 | 행정윤리(전문직업상의 행동규범), 대표관료제, 공익                            | 민중통제, 시민참여, 이익집단, 언론매체, 정당 |

19.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퇴직 후의 고발은 내부고발이 아니다.
- ② 조직 내의 비정치적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③ 내부고발은 익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④ 내부고발은 공직사회의 응집력을 강화시킨다.
- ⑤ 내부적인 이의제기 형식과는 다르다.

[정답] ⑤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p.1460-1461

[해설] 내부고발(whistle-blowing)은 조직 구성원인 개인 또는 집단이 불법·부당·부도덕한 것이라고 보는 조직 내의 일을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행위이다.

- (1) 윤리적 신념에 바탕을 둔 공익 추구적 이타주의적인 외형
- (2) 실질적 동기의 다양성 : 공익 외에 사익 추구 성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3) 고발자의 위상 : 일반적으로 고발자의 지위가 피고발자의 지위보다 낮다.
- (4) 비통상적 통로 : 상관의 권위에 대한 불복중에 해당한다.

- ① 내부고발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의 고발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② 내부고발은 조직 내의 불법·부당·부도덕한 행위와 관련된다. 따라서 정치적 행위라고 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④ 내부고발은 서로 감시하는 체제가 형성되기 때문에 공직 사회의 응집력은 약화될 것이다.

20. 전자정부법에서 천명된 운영원칙이 아닌 것은?

- ①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 ②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 ③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④ 행정정보 준수의 원칙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

[정답] ④

☞ 참고 : 알과 행정학개론 p.1556

[해설] ④는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원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 전자정부의 구현 및 운영원칙

- (1) 국민편익 중심의 원칙 : 업무처리과정은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한다.
- (2) 업무혁신 선행의 원칙 : 미리 해당 업무의 처리과정 전반을 전자적 처리에 적합하도록 혁신한다.
- (3) 전자적 처리의 원칙 :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4) 행정정보공개의 원칙 : 행정정보는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공개

되어야 한다.

(5) 행정기관 확인의 원칙 : 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민원인에게 확인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6)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 : 행정기관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과 공동이용 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 : 개인정보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8) 중복투자 방지의 원칙 :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행정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자원과의 상호 연계 및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 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 행정기관은 가급적 민간부문에 기술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